민주 "與·安 공천 땐 지방선거 패배" … '불가피론' 띄워 출구찾기

새누리당 공천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판단

"무소속 출마 위해선 탈당 불가피" 현실론도

당론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그동안의 주장을 접고 '6월 지방선거 땐 공천 불가피론' 쪽으로 출구 찾기에 나설 조짐이다.

새누리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기미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마저 침묵으로 일관, 공천 폐지 관철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만이라도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민주당이 무공천하면 선거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소속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는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 때문에 '무공천론'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말이나 일요일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주 중 당무위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 권리당원 투표 등 당내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14일 탈당하지 않고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논의키로 했으나 그 결론이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끝나는 2월말 이전에 결론을 내려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 방법을 논의하는 등 공천 유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21일이어서 이전에 결론을 내주는 것이 소속 후보들에 대한 도리라고 당 지도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내 일각에서 민주당 만이라도 '무공천'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점.

하지만, 당내에는 '공천 불가피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 광역단체장 회의에서도 무공천 반대가 압도적이었고 찬성하는 단체장의 경우도 조직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새누리당 1번, 민주당 2번, 통합진보당 3번, 정의당 4번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만 '무공천'할 경우엔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 민주당'이 빠지고, 민주당을 탈당한 출마자들은 지역마다 난립한 다른 무소속 후보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제로 기호를 받게 돼 인지도가 떨어지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기초선거 무공천할 경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가 서로 힘을 돼주는 시너지효과가 사라져 5%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수도권 선거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모두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주당이 무공천을 할 경우,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유지된다면 현직 시·군·구 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군과 측근들을 합쳐 1만명 내외의 인사들이 탈당을 감행해야 한다는 점도 '공천 불가피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 명의 당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당원의 이탈은 지방선거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이다.

원내 핵심 인사는 "민주당으로선 공천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며 "다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3일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2014년도 교육.문화분야 업무보고'에서 보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공천 금지 문제 판단한 바 전혀 없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3일 기초의원 후보의 소속정당 표방 금지가 위헌이라는 2003년 헌재 결정과 관련, "(헌재가) 정당공천 금지 문제 자체에 대해 판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이 2003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데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결정 내용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 6·4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새누리당과 신중론을 제기한 민주당 등 야당간 공방이 이어지자 "법리 뿐 아니라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2월 18일로 정해진 상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 "교과서 국정 전환 검토"

문체부 "인문 정신 진흥법 추진"

신년 업무계획 보고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수능 영어시험에서 지시지문 길이를 대폭 줄이는 등 쉽게 출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올해 국민문화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문화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우선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이수 여부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축소하도록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논술 전형 축소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빈칸 추론 채우기 문항 수를 7개에서 4개로 줄이고 출제 과목을 '영어Ⅰ', '영어Ⅱ'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항목당 지문의 길이를 줄이는 등 영어 수능 시험지의 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작업 일부를 마무리 지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울 교과목과 교과목별 수업시수 등 총론의 핵심사항을 7월에 발표한다.

이와 함께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교과서를 국정 또는 검·인정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하는 국·검·인정 구분고시도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고등학교 들어갈 시기의 외국어고, 자사고 등 고입전형 기본 내용을 알 수 있게 사전 예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교육업체의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우선 재직 중인 교사가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문체부**=국민이 생활 속에서 더욱 쉽게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데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국민 문화 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20개소의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등 생활권에 기반한 복합 문화 활동 공간이 만들어진다.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또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50개관, 공립 박물관 12개관, 작은 도서관 36개관을 추가로 확충한다.

문화 취약계층의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도 발급된다. 가구당 10만원 씩 총 144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예술분야의 창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최대 80%(연간 2000만원 이하) 지원하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작년 30%에서 50%로 끌어올린다.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마이스(MICE, 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한류관광 등 4대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추진

광주 국회의원들·정홍원 총리 간담회 무산

강기정 의원 "정총리 무성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무성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촉구를 위한 총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간 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를 위한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간담회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었지만, 총리실 실무진의 업무실수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국무총리의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총리실은 어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신속히 마친 뒤 간담회를 갖기로 해놓고 표결 후 면담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고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위해)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총리는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며 "총리실이 실무진의 업무착오에 대해 사과하고, 금요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 재추진 의사를 전달해 왔으나 거부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사안을 국가보훈처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 무산은 5·18 광주의 상징과 야당을 바라보는 국무총리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출발한다"며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답습하는 총리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